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공보

제1191호 2024. 3. 13. (수)

고시

제2024-26호 도로명주소 고시문

---2

공고

제2024-322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
제2024-326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7
제2024-327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4
제2024-328호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2
제2024-329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8
제2024-330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36
제2024-331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45
제2024-332호	부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66
제2024-33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73

공										
람										

발행 : 부산광역시 북구

편집 : 미래전략실 (☎309-5421)

고 시

○부산광역시북구고시제2024-26호

도로명주소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3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가람로52번길 67 등 2필지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종전주소(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구포동 420-6	가람로52번길 67	2024-03-13	2010-02-03	가람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20m지점에서 오른쪽으 로 분기되는 도로
구포동 420-7	가람로52번길 71	2024-03-13	2010-02-03	가람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20m지점에서 오른쪽으 로 분기되는 도로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변경사유
(0건)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가람로52번길 69 등 2필지	2024-03-13	건축물대장 말소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 03.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4-322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카카오페이 납부 등 지방세 납부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33(구포동)(우편번호:46504)

2) 연락처 : ☎ 051-309-4183, FAX 051-309-4209, E-mail : psoccer@korea.kr.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자동이체”를 각각 “자동납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2. (생략) 3. 전자송달과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 천원 ② (생략)	제7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1. 자동납부 ----- ----- : ----- 2. (현행과 같음) 3. ----- 자동납부 ----- ----- : ----- ----- ② (현행과 같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2023. 3. 14.>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목개정 2017. 12. 26.]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13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을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한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변경함 (안 제5조)
- 나.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청구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를 추가하여 선정대리인 청구인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보완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 다. 보내실 곳

-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33(구포동)(우편번호:46504)
- 2) 연락처 : ☎ 051-309-4183, FAX 051-309-4209, E-mail : psoccer@korea.kr.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제8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세 대상 등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 ----- ----- -----45만원-----.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 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26., 2020. 12. 29.>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 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9.>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6. 12. 27.>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절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지방세법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6. 8. 31.>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4.,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2021. 12. 31.>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오피스텔의 용도별·층별 지수

나. 오피스텔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2. 선박: 선박의 종류·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 급령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3. 차량: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톤수별·형식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5. 입목(立木): 입목의 종류별·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입목의 목재 부피, 그루 수 등을 적용한다.

6.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별·형식별·제작회사별·정원별·최대이륙중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7. 광업권: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 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서 해당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뺀다.

8. 어업권·양식업권: 인근 같은 종류의 어장·양식장의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양식업의 종류, 어장·양식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양식업의 방법, 채취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다.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분양 및 거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10.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도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 ③ 삭제 <2021. 12. 31.>
- ④ 삭제 <2021. 12. 31.>
- ⑤ 삭제 <2021. 12. 31.>
- ⑥ 삭제 <2021. 12. 31.>
- ⑦ 삭제 <2021. 12. 31.>
- ⑧ 삭제 <2021. 12. 31.>
- ⑨ 삭제 <2021. 12. 31.>
- ⑩ 삭제 <2020.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4-327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미비로 일부조항 추가(안 1조의2)

나. 압류 예술품등의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에 관한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3조)

다. 매각대금 배분에 관한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변경·추가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33(구포동)(우편번호:46504)

2) 연락처 : ☎ 051-309-4183, FAX 051-309-4209, E-mail : psoccer@korea.kr.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법률과의관계) 부산광역시 복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법103조의3제1항”을 “법제103조의4제1항”으로 하고, 제1호의 “법103조의3제1항”을 “법제103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법 제97조부터 제103조”를 “법 제97조부터 제103의2까지의 규정”로 한다.

부 칙

이 시행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법률과의관계)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u>법 제103조의3제1항</u>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구보 및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u>법 제103조의3제1항</u>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생략) ② ~ ③ (생략)	제3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 ----- ----- - <u>법 제103조의4제1항</u> ----- ----- ----- ----- ----- ----- 1. ----- <u>법 제103조의4제1항</u> ----- -----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매각대금의 배분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u>법 제97조부터 제103조</u> 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9조(매각대금의 배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97조부터 제103조2까지의 규정</u> ----- ----- ----- ----- ③ (현행과 같음)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 28.]

[제103조의3에서 이동 <2023. 12. 29.>]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채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삭제 <2022. 1. 28.>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채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 연기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채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채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채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92조의2제5항에 따라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채납자, 채권 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채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2024. 7. 1.] 제98조제2항

- 제99조(배분 방법)** ①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채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채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채납액·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 ②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채납액에 충당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채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채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을 할 때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채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 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 제100조(국유·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6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채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 채납액에 충당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채납자에게 지급

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열람·복사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101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개정 2023. 12. 29.>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④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체납자등이 제102조의2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의 추가 배분을 실시하려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추가 배분기일에 제102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종전 제103조의2는 제103조의3으로 이동 <2023. 12. 2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내용	의견	비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4-328호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기획감사실-17756, 23.12.20호 와 관련)에 따라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의 공정성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급대상자 제한 규정 항 추가 (안 제2조)
- 나. 위원회 위원 구성 내용 개정(안 제5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보내실 곳

-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33(구포동)(우편번호:46504)
- 2) 연락처 : ☎ 051-309-4183, FAX 051-309-4209, E-mail : psoccer@korea.kr.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5급이상 공무원은 포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특별회계는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관업무 부서의 장과 지방세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팀장 중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특별회계는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1.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조(지급대상자)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5급이상 공무원은 포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의3(세입포상금지급심의 위원회 구성 등) ① ~ ② (생 략)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특별회계는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관업무 부서의 장과 지방세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팀장 중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생 략)	제5조의3(세입포상금지급심의 위원회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특별회계는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1.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현행과 같음)

지방세기본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9.>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 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8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3. 14.>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4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법 제14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③ 법 제14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 ④ 법 제1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 ⑤ 법 제146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 ⑥ 법 제14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한 『지방세기본법』 제2조 개정사항을 반영(안 제4조, 제11조)
- 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 「지방세기본법」 제5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함(안 별지 제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 다. 보내실 곳

-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33(구포동)(우편번호:46504)
- 2) 연락처 : ☎ 051-309-4183, FAX 051-309-4209, E-mail : psoccer@korea.kr.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산광역시 복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산광역시 복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1조 후단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각각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등을 갖춰 놓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 ----- ----- ----- ----- -----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처리 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 ----- ----- ----- 지방세통합 정보통신망----- ----- -----.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 번호	지방세환급 내역										결재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재			지급필통지사항		
	연도	책호	세목	지방세환급금			환급대상자		과오납 연월일	사유	담당 자	팀 장	과 장	조정 연월일	지방세환급가산금			총당	계좌 경정	명령 번호	지급 명령액	담당 자	팀 장	과 장	일자	수령자	대조자 인	
				계	지방 세 (가산 세포 합)	가산 금	성명	주 소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 가산금	계											
월계																												
연도계																												
총 누계																												

구분	지방세환급금 결의액	총당액	계좌 경정액	지급명령액 ①	반송분 ②	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	지급 및 통지액 ④	차감미지급액 ③ - ④	결재		
전월까지 누계									담당자	팀장	과장
당월계											
연도계											
총 누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 12., 2021. 12. 28., 2023. 12. 29.>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5.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
6.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7. “과세표준 신고서”란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8.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란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9.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0.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13.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19.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4. 삭제 <2020. 12. 29.>
25. “체납처분비”란 「지방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6.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7.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28.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28의2. “연계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0.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1. “전자송달”이란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32. “체납자”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35. “과세자료”란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관하여는 도(道)에 관한 규정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 관하여는 도와 시·군에 관한 규정을, 구(區)에 관하여는 시·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 공무원”은 각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 공무원, 광역시 공무원, 특별자치시 공무원 또는 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 “시·군”, “시·군세”, “시장·군수” 또는 “시·군 공무원”은 각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구”,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구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 공무원, 특별자치도 공무원 또는 구 공무원”으로 본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
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
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26., 2020.
12. 29.>
-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9.>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산금) 삭제 (2020.12.29)

※ 2022.1.28. 개정(법률 제17770호, 부칙 제1조 단서)

위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4.1.1부터 삭제(제4조) 시행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가산금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

제31조(증가산금) 삭제 (2020.12.29)

※ 2022.1.28. 개정(법률 제17770호, 부칙 제1조 단서)

위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4.1.1부터 삭제(제4조) 시행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가산금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4-330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여 규칙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한 『지방세기본법』 제2조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
- 나.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3조, 제8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 다. 보내실 곳

-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33(구포동)(우편번호:46504)
- 2) 연락처 : ☎ 051-309-4183, FAX 051-309-4209,

E-mail : psoccer@korea.kr.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산광역시 복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산광역시 복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후단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하고, 제3조제2항중 “제1호서식의”를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로 하며., 제8조제2항 및 제11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각각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 ----- ----- ----- -----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 ----- -----.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생략)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 같은 법 제50조 ----- -----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 -----.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생략)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 ----- 같은 법 제50조 ----- -----.
제11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생략)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 ----- 같은 법 제50조 -----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 12., 2021. 12. 28., 2023. 12. 29.>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5.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
6.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7. “과세표준 신고서”란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8.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란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9.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0.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13.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

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19.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4. 삭제 <2020. 12. 29.>
25. “체납처분비”란 「지방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6.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7.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28.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28의2. “연계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0.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1. “전자송달”이란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32. “체납자”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35. “과세자료”란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관하여는 도(道)에 관한 규정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 관하여는 도와 시·군에 관한 규정을, 구(區)에 관하여는 시·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 공무원”은 각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특별시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 공무원, 광역시 공무원, 특별자치시 공무원 또는 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 “시·군”, “시·군세”, “시장·군수” 또는 “시·군 공무원”은 각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구”,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구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 공무원, 특별자치도 공무원 또는 구 공무원”으로 본다.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3. 3. 14.>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구를 한 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과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

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나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나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본다. <신설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8.>

⑦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2021. 12. 28.>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4-331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서식 등을 정비하여 규칙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한 「지방세기본법」 제2조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4조 및 제23조)

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 「지방세기본법」 제5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등을 정비함(안 제9조 및 제15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병),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의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별지 제1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33(구포동)(우편번호:46504)

2) 연락처 : ☎ 051-309-4183, FAX 051-309-4209, E-mail : psoccer@korea.kr.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안

부산광역시 북구 시행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후단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및 제15조 중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제23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병),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세 대상 등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 한다)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자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 ----- ----- ----- -----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 -----.
제9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된 미수납된 시세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여 납기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액 정리부에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기재하여 그 체납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납기마감 처리) ① ----- ----- -----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 -----.
제15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체납액 이월) 해당 회계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징수부의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그 체납액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체납액 이월) ----- -----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 -----.
제23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처리 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 -----.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right: 20px;"> <div style="font-size: 40px;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input type="checkbox"/> 부과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정리보류 <input type="checkbox"/> 시효완성정리 </div> <div style="font-size: 40px; margin-left: 10px;">]</div> </div> <div style="font-size: 24px; margin-left: 20px;">결정결의서</div> </div>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 통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지방세 (가산세포함)	계			
	항		세액						
			가산세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납세인원		시(도) 구(시·군) 번길 외 명							
적요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수납부 등재 (인)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환급금 정리 (인)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수납부 등재 (인)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환급금 정리 (인) </div>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내역서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 목 []세 / 세목구분 [] / 구·군 []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부과년월-동-번호-기분		부과일	최초기한일	가산기한일	○○세	○○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총액	체납액계
압류사항	가산횟수	물건			가산세	가산세	가산세	가산세	가산세	가산세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7호서식]

○ ○ 이월 체납액 정리부

○○년도 ○ ○기(월)분

(○ ○ 읍·면·동)

과세 번호	세목	본세	과년도 가산세 총계	가산세												가산세 총누계	수 납 인	체납자 주소	과세 물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10mm×297mm(백상지 80g/㎡)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지방세 (가산세포함)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정 리 보 류 표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

시효 완성 정리표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80g/m²)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정리보류여부		
		지방세 (가산세포함)	가산금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p>「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p> <p>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p>							
※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년 월 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세(정리보류액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총 체납액은 년 월까지 **가산세**를 가산한 체납액이, 세목 및 납부기한은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및 납부기한이,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또는 문의는 부산광역시 북구 세무1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103조의4제 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 및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자격 입증서류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 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채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채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세포함)
채납처분비				
합계				

끝.

발 신 명 외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 12., 2021. 12. 28., 2023. 12. 29.>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5.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
6.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7. “과세표준 신고서”란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8.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란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9.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0.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13.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19.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4. 삭제 <2020. 12. 29.>
25. “체납처분비”란 「지방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6.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7.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28.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28의2. “연계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0.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1. “전자송달”이란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32. “체납자”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35. “과세자료”란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관하여는 도(道)에 관한 규정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 관하여는 도와 시·군에 관한 규정을, 구(區)에 관하여는 시·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 공무원”은 각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 공무원, 광역시 공무원, 특별자치시 공무원 또는 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 “시·군”, “시·군세”, “시장·군수” 또는 “시·군 공무원”은 각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구”,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구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 공무원, 특별자치도 공무원 또는 구 공무원”으로 본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
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26., 2020. 12. 29.>
-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9.>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산금) 삭제 (2020.12.29)

※ 2022.1.28. 개정(법률 제17770호, 부칙 제1조 단서)

위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4.1.1부터 삭제(제4조) 시행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가산금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

제31조(증가산금) 삭제 (2020.12.29)

※ 2022.1.28. 개정(법률 제17770호, 부칙 제1조 단서)

위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4.1.1부터 삭제(제4조) 시행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가산금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4-332호

부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기획감사실-17756, 23.12.20호 와 관련)에 따라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위원의 민간전문가 과반수 이상 위촉 명확화로 공정성 제고(안 제4조)
- 나.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이해충돌 가능성 방지 강화(안 4조의2)
- 다. 금고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교부하거나 열람할 경우 공개성·투명성 강화(안 제5조)
- 라. 협력사업비 공개의 투명성 제고(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보내실 곳

-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33(구포동)(우편번호:46504)
- 2) 연락처 : ☎ 051-309-4183, FAX 051-309-4209, E-mail : psoccer@korea.kr.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의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이 되도록 한다.”로 하고, 제2호 중 “추천하는 자 1명”을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 제1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평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2항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항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 제1항 하단 중 “있다”를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제3항 하단 중 “공시한다”를 “공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 ② (생 략)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② (현행과 같음)
<p>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p> <p>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p> <p>3.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구금고업무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등 금고 업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p>	<p>③ -----</p> <p>-----</p> <p>----- 위원은</p> <p>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의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이 되도록 한다.</p> <p>1. -----</p> <p>2. ----- 추천하는 구의원 1명</p> <p>3 - - - - -</p> <p>-----</p> <p>-----</p>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5조(금고지정의 절차)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의 약정기간 만료 3월 전까지 새로운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보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② ~ ⑤ (생략)</p> <p>제10조(협력사업비 공개 등)① ~ ② (생략)</p>	<p>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 신설 제1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p> <p>1. 위원이 해당 심의·평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p> <p>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p> <p>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p> <p>제2항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제3항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p>제5조(금고지정의 절차) ① -----</p> <p>-----</p> <p>-----</p> <p>-----</p> <p>-----</p> <p>-----</p> <p>-----</p> <p>-----</p> <p>-----</p> <p>-----있도록 하여 한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협력사업비 공개 등)① ~ 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③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편성내역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③ ----- ----- ----- ----- 공시하여야 한다.

참고

관련 법령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3월 13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서식 등을 정비하여 규칙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증명서 및 발급대장 서식을 정비하고 발급대장의 비치관리를 전산출력관리 병행 가능 하도록 단서 규정 추가(안 제3조)
- 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증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지방세 징수법』 제30조 및 제30조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정비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보내실 곳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33(구포동)(우편번호:46504)

2) 연락처 : ☎ 051-309-4183, FAX 051-309-4209,

E-mail : psoccer@korea.kr.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1호서식 및 제2항 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제증명발급 및 공부열람”을 “제증명발급”으로 하고 “다만, 전산출력이 가능한 경우는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제4항 중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증명서 서식 및 발급대상) ① (생 략) ② 구청장 및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u>제증명 발급 및 공부열람</u>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증명서 서식 및 발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증명발급----- -----, <u>다만, 전산출력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u>
제4조(발급요령) ① ~③ (생 략) ④ 과세액은 <u>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은</u> 본 세액만을 기재하고 지난 연도분의 경우에는 과세대장에 확인되는 한 민원인이 요구하는 연도분의 과세 실적을 증명하여 발급한다. ⑤ (생 략)	제4조(발급요령)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과세액은 본 세액만을 기재하고 지난 연도분의 경우에는 과세대장에 확인되는 한 민원인이 요구하는 연도분의 과세 실적을 증명하여 발급한다. ⑤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발급번호 :
Issuance Number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 Foreign) Registraion No.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상호 Company Name	사용목적 Purpose of Use				
과세대상 Tax Objects					
세목 Tax Items	부과연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고 Remarks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수입증지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FEE

년 월 일(YYYY/MM/DD)

신청인 성명(법인명):
Applicant Name(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부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

The Chief of Buk District

※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certificate does not verify the ownership of any properties.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 서식]

제 증 명 발 급 대 장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동장

출력일자 :

담당부서 :

[illegible]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87조 제1항 및 영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② 법 제87조 제1항 및 영 제57조 제3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의 제공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 발급대장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 제공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26., 2020. 12. 29.>
-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9.>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산금) 삭제 (2020.12.29)

※ 2022.1.28. 개정(법률 제17770호, 부칙 제1조 단서)

위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4.1.1부터 삭제(제4조) 시행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가산금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

제31조(증가산금) 삭제 (2020.12.29)

※ 2022.1.28. 개정(법률 제17770호, 부칙 제1조 단서)

위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4.1.1부터 삭제(제4조) 시행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가산금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